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 어려운 이유

조 중 빈
국민대학교

I.

“학자들은 서양의 정치이론에 안주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탑니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에서)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아는 만큼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만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2005년 10월 24일) 답변에서)

“쏟아지는 소리 아니라 헛소리 ………. 사실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얘기도 연세 많은 학자가 하기만 하면 ‘쏟아지는 소리’가 된다” (국회의원 유시민, 서울대 특강(2005년 11월 14일)에서)

정치인들이 학자나 지식인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듯 불만이 많고, 그 불만을 표시함에 있어 조금의 겸양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촌음을 기다리지 않고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학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주역들이 집권 초기에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고, “국민과의 대화”를 常設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는데, 토론과 대화는 실종됐고, 남은 것은 지식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타는 가슴과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민정부에서 지식과 정치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다. 어디에서인가 꼬인 것이다. 군사독재와 민간인 정부, 그 사이 어디에선가 꼬였다.

Ⅱ. 희생 제물이 된 지식

“신지식인”이라는 말을 아직은 기억들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느 구청의 빛바랜 간판 속에서나 보게 되지만,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이 말이 가졌던 위력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그 때 그 사람들에게 “신지식”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구지식인”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이만큼 명분 있는 구실도 없었으리라. “신지식인”이 뜨게 되니 “구지식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반정부인사가 되고 반민주 세력이 된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면 된다.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일면 수궁이 가는 점이 있다. “신지식인”이 가진 “기능/기술”은 눈에 보이고 매우 서민적인데 반하여, “구지식인”이 가진 “학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특권이나 휘두르는 것으로 비친다. “신지식인”이라는 말은 이제 인구에 회자되지 않지만 “지식이 뭐 별것이냐”라는 생각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고 떠났다.

우리의 현대정치사에서 지식만이 정치의 희생 제물이었던가? 지역, 이념, 세대, 성별, 민주화, 이 모두가 지금도 우리의 정치지형을 구겨놓고 비틀어 놓고 있다. 다른 모든 제물들은 팔다리가 쪼그름겨 묶여 있거나, 풀려 있다고 해도 식물인간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지식에는 주체가 있기에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희생당하지는 않는다. 지역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고, 세대인, 성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식에는 지식인이 붙어 있다. 그 사람이 지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지식인 중에 특별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지성인이라고 부른다. 사람들 보고 “지식인 될래,” “지성인 될래”하면 심중팔구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지성인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지식을 가진 이가 느낄 줄 알면 지성인이라고 본다.

Ⅲ. 실종된 “우리들 이야기”

그런데 우리 학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지 오래되었다. 느낌이 무더진 것이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대표적 공론의 장이 세미나 장소인데, 청중보다 발표자와 토론자 수가 많은 곳이 많고, 시간에 쫓겨 황망한 가운데 끝나기 일쑤다. 대학에 돌아와도 동료나 인접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만나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유학 시절에 샌드위치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지 토론을 하

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정도 되면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 어색함, 불안감 등 말이다. 서로 속내를 터 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니 알 수 없으나 왜 느낌이 없겠는가? 외국에서 평생을 보낸 한 선배 학자에게 하소연 했다가 얻은 대답은 나에게 확신을 안겨주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밤을 새운들 못할 것인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필자를 늘 괴롭혀오던 문제가 하나 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사회는 결핍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왜 공부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어우러져 일궈내는 우리들의 정치 이야기는 엮어낼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교차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에 입각해서 한국정치를 보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¹⁾ 그리고 그 시각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올 생생한 우리들의 정치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가를 위시하여 온 사회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학자들이 이 생생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들으나 마나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자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지식을 무력화 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생산과 지식전달의 통로를 독점함으로써 무지주의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현실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지성인이라고 본다. 지성이 살아있어야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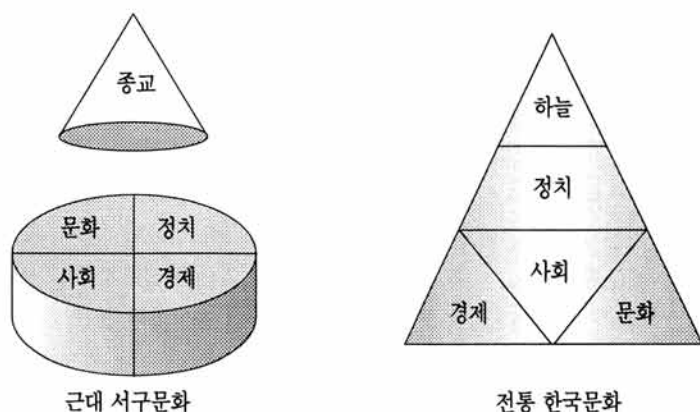
IV. 문화와 정치

정치문화라는 말이 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몬드와 버바의 Civic Culture를 떠올릴 것이다. 정치학의 고전이지만 이제는 별로 읽히지 않는 책이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분석의 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저자들의 정치문화개념도 특

1) 조준빈, “한국정치연구와 문화교차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2003), pp.47-63.

정한 문화(물론 정치문화보다 상위에 있는 문화)의 산물이고, 그 상위의 문화가 다르면 정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정치를 이해할 때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학자들보고 밤새우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우게 될 것이다. 매우 도식적이고 실험적이지만 <그림 1>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정치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림 1> 정치의 문화적 기초



<표 1> 근대 서구정치와 전통 한국정치

근대서구 정치	功利	갈등 조절	정치의 최소화	정교 분리	法 우선	머리의 정치	논리의 정치	감시받는 정치
전통 한국정치	功善	갈등 초월	정치의 최대화	정교 탈분리	德 우선	마음의 정치	감성의 정치	신뢰받는 정치
교차된 정치	?	?	?	?	?	?	?	?

V. 근대 서구문화 속에서의 정치

근대 서구문화는 삶의 세계를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 영역으로 준별한다. “양시앙레짐”으로 불리는 역사 경험으로 인하여 근대화를 거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 세속적 영역은 어떠한가? <그림 1>에 보이듯이 이를 구성하는 제요소들 중에서 정치와 여타 삶의 영역이 수평적으로 삶

의 공간을 나누어 갖고 있다. 정치가 다른 영역에 대하여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특권은 고사하고 정치의 영역을 최소화 시키고자 했던 것이 근대 초기의 사상과 현실에 나타난 경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정치적 영역, 즉 시민의 영역은 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정치의 영역이 공적(public) 영역이라면 비정치적 영역은 사적(private) 영역이 된다.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사적 영역, 즉 프라이버시(privacy)가 거의 신성시되게 된 연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적 영역의 주인은 물론 개인이고, 그 개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개체는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자유이고, 이는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권리가 된다.

개 개인의 이권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인들이 모였을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시점에서 공적 영역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공적 영역을 정치가 담당하게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소의 정치가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정치영역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정치가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진다. 정치가들을 믿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권력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안 되고, 정치가들은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이상의 분석이 서구에서 근대 이후에 정치가 처하게 된 문화적 맥락의 요체이다. 우리가 국민교육을 통해서나 학술적 훈련을 통해서 잘만 배웠다면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은 이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알게 모르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권리의식도 없고, 질서의식도 없고, 모든 것이 정치 아닌 것이 없고,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야말로 후지고 촌스럽다고 자학한다.

Ⅶ. 전통 한국문화 속에서의 정치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촌스럽게 만드는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위치는 서구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우선 정치를 세속적 영역에 분류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세속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즉 위계상 상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정치가 우리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간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정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이상이 된다. 정치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정치에 기대고, 잘못되면 정치를 탓한다.

그러면 정치는 무슨 원리 또는 가치를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먹고사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개체로부터 생성된 전체라는 개념 대신에 전체가 있고 그 안에서 개체들이 어떻게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구도 속에서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다. 최봉영 교수는 이런 종류의 전체를 통체(統體)라고 했는데 탁월한 분석이다.²⁾ 통체에서는 정치의 역할도 그에 걸맞게 부여된다. 개별자의 이익들이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조절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어떻게 하면 통체의 이익, 즉 공공선이 달성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 된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정치가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이어진다. 정치가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은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덕성을 함양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덕성이 높은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의 높은 덕은 하늘까지 닿아야 하니 지도자는 늘 배우고 근신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정치는 “종교적” 색채를 띠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종교란 서구의 개념과는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하늘 개념에는 서구에서와 같이 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욕망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치가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

VII. 전통 정치와 서구 정치의 교차

우리를 촌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정치와 정치가에 대하여 보내는 이러한 기대와 믿음이다.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누구를 믿느냐고 야단을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눈 뜨고 정신 바짝 차리면 될까? “믿음의 체제”에서 “감시의 체제”로 들어가면 될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게 문화현상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믿고 또 믿는 것이 문화현상이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바보인가? 다 제 살길 찾기 마련이다. 밤낮을 달리하여 이중생활을 하면 된다. 서로 믿는 척 하면서 뒤로는 서구 사람들보다 더 민첩하게 썰기는 현상을 보고, 한국 사람은 야비하고 법을 지킬 줄 모른다고 비난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전통적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위로다. 형식 논리적으로 맞는

2)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1』 (서울 : 느티나무, 1994), pp. 26-35.

말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단순히 서구의 “감시 체제”가 우리의 “믿음 체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인가? 문화교차 패러다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교차된 상태를 과도기라고 이름 하여 괄호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교차된 상태 그대로가 적응과 창조의 과정이라 보고, 교차된 상태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병”이라고 자학하듯 내 뱉는 말들이 사실은 문화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적응행위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된다. 오히려 자학하는 그 행위가 정체성 위기에서 오는 병리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적응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믿고 또 믿으려는 경향이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면 정치인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주머니나 먼저 챙길 일이지 병풍이든, 탄핵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의 행위의 바탕에는 도덕주의, 이상주의가 넘친다. 국회가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그런 법은 여하 간에 어떻게 대통령을 부패한 정치가들이 탄핵할 수 있는냐는 게 대다수 국민의 정서였다. 그렇게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이제는 거꾸로 불신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국정수행 능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널뛰는 국민의 지지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감시의 체제” 시각에서 보면 정신이 나갔거나 감정적인 현상일 뿐이다. “믿음의 체제” 시각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일관된 잣대의 적용이다. 정치가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은 합리적 선택에 수반되는 호오(好惡)의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당, 선거, 삼권분립 등 수립된 제도들은 “감시의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체제”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바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될 자리이다.

VIII. 문화교차를 공론의 장으로

독재체제 아래에서 공론이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외치는 것이었다. 억압에 대항하여 자유를 외치는 데 무슨 거창한 이론이 필요하겠는가? 민주를 이야기만 해도 지성인이 됐다. 그런데 억압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온 이 마당에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성인이 설득력을 잃

어가기 시작했다. 경제의 종속보다 지식의 종속이 더 무섭다고, 지식의 자율성이 결여되니, 지식이 대중들로부터 소외되고 권력자로부터 무시되기 시작했다. 담론이네 하면서 수입된 주제를 돌려가며 분칠을 해도 종속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의 교차점에서 적응과 부적응, 창조를 거듭하며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공론의 장은 펼쳐지지 못할 것이다.